

# 민주 최고위도 친명계 체제 굳히나

### 비명계 '이 친정체제' 저지 안간힘 후보 사퇴 운영찬, 송갑석 지지 선언 친명 진영서도 "지나친 욕심은 독"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이제 결승점(경기·서울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당 내외에서 '친명 체제 견제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당권은 확대명(확실히 대표되는 이재명) 흐름이 견고한 가운데, 5개 최고위원직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쓸어 담은 분위기가 나타나자 '친명 친정 체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대가 저조한 투표율 속에서 확대명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차기 총선이라는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하면 비명(비이재명)계의 결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전대 분수령이었던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에 쐐기를 박은 만큼 여세를 몰아 역대 최고 득표율을 찍고 '강한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내외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 보다는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과연 친명 최고위원 주자들 전원이 당선권에 진입하느냐는 것이다. 친명 진영에서는 수도권 경선에서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명계 주자인 송갑석 후보에 대한 실질적 배제 투표가 이뤄진다면 친명 주자 4명 모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두 명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강고한 친명 친정 체제가 구축된다.

하지만, 전대 막판 민주당 내외에서 친명 체제에 대한 강한 견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친명 진영 내부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 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를 이슈화하며 이 후보에 대해 강한 견제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전당원 투표 조항'을 언급하며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발(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했다.

이울러 비명 진영에서는 친명계의 최고위 독식을 막기 위한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용진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친문(친문재인) 운영찬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토론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과 이원욱(3선)·김종민(재선) 의원 등 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비명 진영에서는 운영찬 의원이 전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송갑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친명 견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입장이

다.

현재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9%로, 당선권인 5위의 친명 주자인 박찬대 후보(9.47%)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경선 및 대의원 투표에서 비명 진영이 결집해서 송 후보를 지지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관측이다. 또 송 후보가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었던 중앙위원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친명 주자들은 모두 수도권 지역구라는 점에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송 후보는 호남에 비명계 지역위원장들의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는 수도권 경선 및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및 친이(친이낙연)계 지역위원장들과 물 밀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86세대 지역위원장들도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신수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정

광주시의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북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지역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3년 사이 288%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85건으로 집계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신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굴해 범죄피해를 막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강수훈, "광주 전략사업 추경예산 주먹구구 편성"

광주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서구1)은 2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데 있어 광주시는 한시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발표된 2027년 이후 건립될 공공임대 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근본 대책은 전혀 부재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시 발생하는 관리비 8038만원과 주거비 지원으로는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강 의원은 또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3월 기준 135개 중 94개의 인공지능기업이 광



주에 개소했지만, 기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을 감액할 만큼 행정적 절차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I기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정액 13억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강 의원은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도시, 광주형 일자리 1만개 창출,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는 기치로 다변화했다"며 "민선 8기는 과연 어떤 전략적 선택과 판단으로 지금까지 이렇듯 사업과 과업들을 완수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와 '소통'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의회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이는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이 22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와 의 인사 교류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 시장은 22일 오후 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3명에게 친서를 보냈다.

강 시장은 친서에서 "항상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깊이 고민했고, 그 누구보다 의정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후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상호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위한 '변화와 활력'의 두 수레바퀴라는 제 진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행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 의회와 함께 하고,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장 의장은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해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신정훈 '혁신도시 국제학교설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하순) 국회의원이 23일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동맹 등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운영 과정은 설립목적에 달성할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련 학교는 5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나 전남, 충남, 충북, 경북 4개도만 없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제학교 유치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전남도정 인수위원회격인 전남 비전·공약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심창욱 "학원강사 성범죄·아동학대 신원조회 소홀"

학원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에 대한 신원조회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북구5) 의원은 23일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원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에 대한 신원조회 미비로 학원생들이 성범죄와 학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학원강사 채용과 관련,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에 52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교육청은 선제적인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학원범죄를 미리 예방해 학생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증원과 함께 신원조회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